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박영아 국회의원



평지대에서 20년간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토'라는 생각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왔던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기술계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됐다.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과학계 동료들과 함께 국가 발전의 근원인 과학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과학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계와 국회의 채널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나를 물리학자에서 과학정책 입법자로서의 변신을 꿈꾸게 만들었다. 여성 과학자라는 전문성과 희소성 덕분에 주어진 일을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어떤 선배 과학자나 교수도 도전하지 못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려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다행히 많은 선배 동료과학자들의 꿈과 성원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했고 2008년 4월 18대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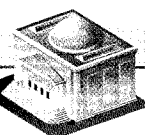
과학계를 구한 '잔다르크'?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국가과학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과학 르네상스를 이루어 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였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이었다.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안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으로 과학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지만 개편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었다. '특별법' 역시 2007년 대통령의 과학기술분야 대표 공약사항으로, 과학자들이 직접 과학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제안을 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2010년이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이라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난망이었다.

안개 속 같았던 상황에서 2010년 12월 8일에 극적으로 우리 과학기술계의 꿈과 염원이 응축된 법안이 직권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던 순간의 감동은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아있다. 여야의 갈등 속에서 2011년 예산안 통과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던 상황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필귀정!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도 진심을 다하니 이루어진 셈이다. 나의 이런 노력으로 위축된 우리 과학기술계가 다시 날개를 달고 미래를 향해 웅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열매 맺기를 희망해 본다.

나를 '과학계를 구한 잔다르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성과는 우리 과학계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것이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송구스럽기도 하다. 이 법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일해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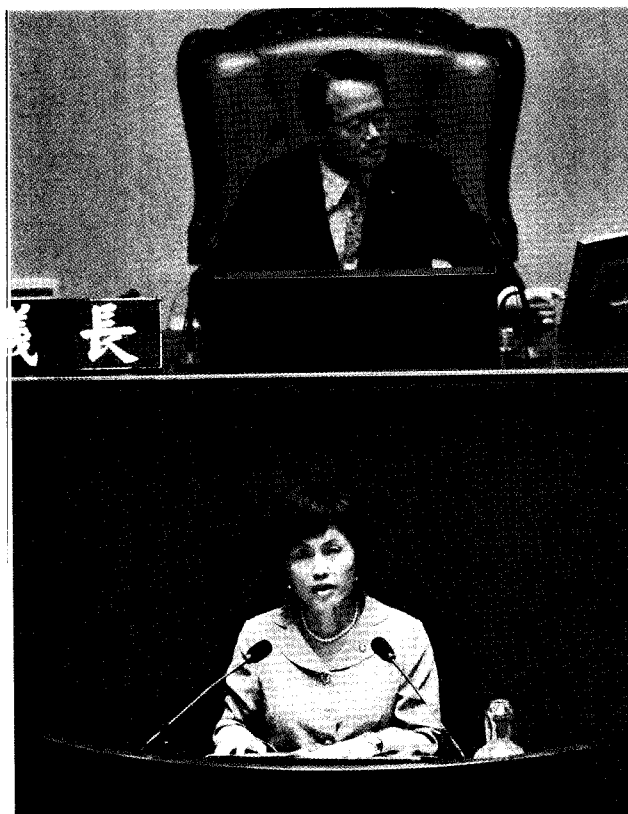
이든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든든하다.

이공계 부활을 위한 노력

최근에는 무엇보다 이공계 기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수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노무현 정부 때 폭넓은 교양과 도덕성을 갖춘 인술인 양성, 대학입학 과열경쟁 완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반발이 매우 커서 결국 의과대학과 의전원이 병행 운용되는 되는 곳도 많았다. 2005년 의전원 출범 이후에는 우수한 이공계 기초과학 인력이 의전원으로 몰리면서 기초과학 기반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005~2008년 사이에 생물학과 졸업생 800명이 의전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전원이 이공계 대학원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09년 9월 국회공청회를 시작으로 의전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 자율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말까지도 교과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다시 국회 공청회를 열고 5월에는 성명서까지 내어 “의학전문대학원 병행체제를 조속히 종결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라”며 정부 측에 촉구한 후에야 2010년 6월 교과부는 방침을 바꿨다. 결국 41개 의전원 대부분이 2015년도 이후 과거의 6년제 의과대학체제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교과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소신으로 일낸 쾌거였다.

최근 1년간은 상임위 활동, 국감과 지난 6월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올해부터 바뀐 ‘2+4년제’ 약학대학 학제에 대해 ‘통6년제’로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4년제’ 학제 역시 이공계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약대 입시 준비에 몰입하도록 하여 이공계 교육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공계 살리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통6년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교과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나는 이공계 황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와 국가차원의 ‘이공계 르



네상스’ 추진을 주장해왔다. 자원도 없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이공계 인적자원과 기술 덕택임이 분명하다. 이런 나라에서 이공계 출신자를 홀대해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융합형 과학’의 산파

모든 학생이 과학은 어렵고 지루하기만한 과목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OECD 조사대상 57개국 중 5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 고등학생들의 과학교육은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지기 전인 1학년 때 공통 과학을 배우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후 문과생은 아예 과학 과목을 안 배워도 되고, 이과생에게도 과학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나는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콘텐츠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 누구인지에 대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구분을 허물고 우주와 생명, 과학과 문명으로 구성하여 배우는



융합형 과학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융합과학 과목이 도입되었다.

학문이란 탄탄한 기초학문을 주춧돌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21세기 융복합 시대에 맞게 융합적인 시각으로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 과학계의 추세이다. 이웃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노요리 료지 이사장은 우리 융합형 과학 교과서를 보고 “왜 일본은 한국처럼 교과서를 바꾸지 못하냐?”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한다. 융합형 과학의 탄생을 통해 어린 시절 내가 과학자를 꿈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으면 한다.

부당한 일은 과감하게 지적하는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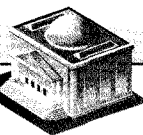
항상 과학기술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현장의 불합리한 모습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KAIST가 2009년 추경 예산까지 받아 추진했던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 하버 관련 원천 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들은 상용화 가능성도 희박하고 사업 타당성도 없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도 없이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여 국민 혈세 500억 원만 날릴 지경이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그 이듬해에는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한 걸음에 달려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절대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결국 지식경제부는 2010년에도 2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

가로 지원했고,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도 정부 부처들이 돌아가면서 밀 빠진 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 R&D는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학연구 현장은 너무도 많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비가 막강한 로비나 인맥을 동원한 일부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성과를 위해 인내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과학자들을 위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직접 나서 맞서 싸울 것이다.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노력

과학자로서의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 어디서건 최선을 다해왔기에 기쁜 일, 보람된 일이 많았다. 그런데 유독 가정에서만은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던 것이 늘 미안했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돕도록 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래 이 법안은 여성과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2002년에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공청회에 직접 찾아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장, 세계물리연맹 제3차 세계여성물리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으면서도 여성과학자들의 지위 향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활동을 통해 느낀 바를 토대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성과학자들이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과학자의 길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다양한 입법 활동 · 22개 법안 제 · 개정 발의

나의 관심은 다양해 과학적 호기심과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점들을 정책과 입법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다. 동식물을 비롯하여 인간 활동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제한하는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한 것도 이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태양력법 사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하고자 천문법안을 제정발의하여 2010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연계 · 협력을 활성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효율적인 연구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법' 등도 이러한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다. 이외에도 고등과학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시켜 순수기초과학 연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과학원법'과 학교 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과학 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3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중 총 22개 법안을 제 · 개정 발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18대 국회 헌정 우수상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는 18대 국회의원 중 12명에게 주는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과학계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한 의정활동이 과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진인사대천명!

늘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과학정책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왜곡되거나 표류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2010년 8월 개최한 '국가 R&D 및 출연연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는 그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과기부가 해체되고 출연연이 또 한번 수술을 당할 처지에 놓인 현실이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과학기술분야와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청하며 시작한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과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부지런해야 할 것 같다. 국과위 출범은 과학계의 큰 성과지만 아직 모양새가 반쪽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예산조정 권한이 상당부분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과위가 제대로 된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기초 연구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과위가 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연연 선진화에 있어서도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혼선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 및 관련법의 재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과 어두운 취업 전망으로 불안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창업가 정신을 교육하고자 한다. 21세기 창업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IT와 과학기술의 융합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멋있는 국회의원보다 젊은이들에게 좌절보다는 꿈을 주는 국회의원이고자 한다. 국과위 출범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바가 있다. 진인사대천명!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것이다. 늘 그랬었던 것처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오늘도 도전은 계속된다. **ST**



“연구 자율성·독자성 확보방안 마련에 주력”

이상민 국회의원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서 연일 쏟아지는 교육분야 이슈로 과학기술 현안이 묻혀가고 있는 상임위에서 과학기술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래서 과학기술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과학기술 국회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국회예결위원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확충했을 때와 과학기술부 해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싸웠던 일이다. 당시에는 민주당의원이었다. 국회재경위원과 예결위원을 겸하면서 과학기술인연금예산 1천억 원과 향후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1천억 원을 합해서 2천억 원의 예산을 확정해 과학기술인연금제도를 시작했고, 역시 민주당 법사위원이었을 때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국회에서 시위현장으로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온몸으로 싸웠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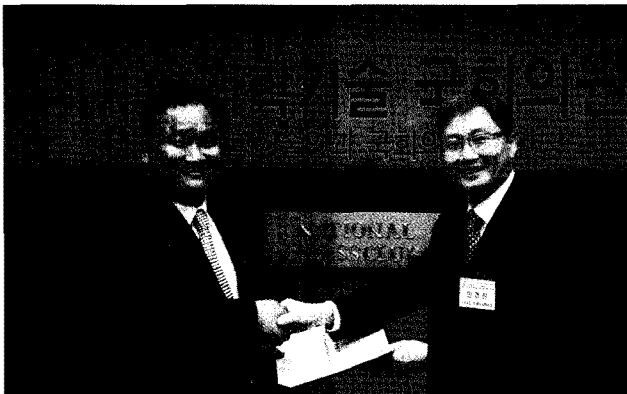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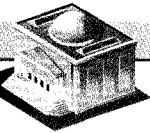
최우수 과학기술 국회의원

지금도 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전기료 감면을 해결한 것을 이야기한다. 당시 연구기관의 전기료는 일반용으로 비싸게 내고 있었다.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20년 숙원 과제였다. 내가 법사위 간사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

을 때였다. 당시 산자부 공무원과 한전에서 찾아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하나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국회건교위에서 올라온 법인데 건설업체가 부담해오던 아파트 단지 내 전기시설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기관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했고, 극적으로 해결해 연구기관의 전기료를 매년 약 60억 원 감면받게 하였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구원의 정년연장 관련 법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에게 교과위 차원에서 촉구결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입법 활동 중 가장 큰 것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을 제정한 것이다. 2006년 4월부터 발효되었는데, 당시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고 연구원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물론 그와 유사한 사고들이 전국의 이공계 연구실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법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해 지금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연구실 사고 예방과 사고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던 것이다. 법통과로 교과부 내에 과가 신설되었고, 연구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입법 활동 우수의원

과학기술인들이 받는 연금의 세금감면 법안도 들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과학기술연금 가운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반영시킨 것이다. 2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42만 원 정도 감면받게 되었다. 그리고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있다. 이 법안은 제대로 된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정활동 가운데, 특히 이공계 지원방안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자퇴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전국 27개 국공립대와 93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자퇴실태를 2년에 걸쳐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3년간 재학 중인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학생이 무려 5만6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 해에 2만여 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이공계 출신 비율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38개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1천479명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203명으로 1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정부 R&D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경우 131명 중 단 1명도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총 220명 중 이공계 출신은 59명으로 26.8%이고, 지식경제부는 4급 이상 347명 가운데 81명으로 23.3%였다. 또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68명 장차관급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소방방재청장관과 교과부 2차관 등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마련 총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연구원 대졸초임 삭감, 비정규직 연구원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시킨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출연(연)통폐합 저지, 65세 정년 환원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마련,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첫째, 65세 정년환원이 절실하다. 지난 1997년 IMF때 65세 정년을 지금의 61세로 조정하였는데 다시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한참 연구할 나이에 연구현장을 떠나게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65세로의 정년환원을 반드시 시행해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이고,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매년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반드시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셋째, 출연(연)통폐합 저지에 앞장서겠다. 청와대까지 나서 연구기관 내부조직을 50~60개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출연연 개편작업과 함께 한국생명공학연구원·KAIST 통합,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대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에 힘 쏟겠다. 예산편성과 배분, 평가, 정책수립, 그리고 단기성과만을 위하여 지경부로 분리한 연구기관들도 모두 과학기술부로 통합하여 국가R&D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만큼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쓸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독자성·자율성 확보 주력

다섯째,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정

책방안을 강구하겠다.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기관 스스로 설립 목적과 취지를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연구기관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 고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단기적 성과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 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연금확충, PBS 제도 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 등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진력할 것이다. 기초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는 예산확보를 이루어내겠다. 아울러 과학벨트와 대덕특구와의 협업과 상생 발전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과학자 한 명이 국민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스웨덴과 “내 아들은 절대로 이공계 보내지 않겠다”고 절규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울분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인들이 무너지면 국가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과학기술인들에게 애국심만을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겠다. **ST**